[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응천(가운데) 문화재청장이 16이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문화재청이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도 개편돼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에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행사도 연다.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도 함께 추진된다.